Part 6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2019. 10)

글로벌

- 세계농업생산성 보고서 발표
-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사례

미국

- 미국 농업부 장관, 미·일 무역협정 관련 성명 발표
-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중장기 미국 농업전망에 미친 영향
- 2018년 미국 가구 식량안보 조사 결과
- 2016-2017년 미국 식품소매가격 하락
- 미국 에탄올 생산 부산물인 DDGs 증가 추세

유럽

- 이탈리아,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 프랑스 농업인, EU 무역협정에 대해 항의
- EU, 농산물의 가격 투명성 강화 조치 도입 결정
- 영국,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 지속
- EU, 농업지식혁신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발간
- EU, 2018년 공동농업정책 회계 감사 결과 발표

일본

-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 동향
- 농촌 지역 인구와 마을 미래예측(2045년 농촌구조)
- 농산물 수입(收入)보험 개선
- 소비자식품 동향
- 미·일 무역협상



글로벌

세계농업생산성 보고서 발표

❍ 최근 발표된 세계농업생산성(Global Agricultural Productivity, GAP)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농업의 생산성은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식량, 사료, 바이오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63% 수준으로 2050년까지 증가하는 세계인구 약 100억 명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률 1.73% 보다 낮은 수준임.

❍ GAP연구원들은 세계 농업의 생산량 증가 속도가 느리다고 5년 연속 주장하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의 현재 농업성장률은 0.96%로 3년 전 1.5% 보다 낮아짐.

❍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지속된다면 환경의 지속가능성, 농업부문의 경제 활력, 빈곤, 영양실조, 비만인구 감소 전망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이 넘는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6억 6,000만 명의 성인과 1억 2,000만 명의 아이들이 비만임.

❍ GAP 연구 목표는 토지, 노동, 비료, 사료, 기계류 및 가축과 같은 농업 투입물이 식품, 사료, 섬유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환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 GAP 연구진은 농업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수확량과 영양 품질 개선을 위한 공공 연구에 투자하고, 과학기반 기술에 투자 지원, 도로 및 관개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전략 등을 강조함.

- 또한 NGO 및 개발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국제무역을 육성할 것을 제안함.

❍ GAP연구원들은 생산량이 효율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식량과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 많은 토지와 물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기후변화로 이미 위협을 받고 있는

천연자원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 보고서는 지속 불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지하지 않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축과 식량 소비의 전환을 요구함.

❍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의 생산량 향상은 비료 및 경작지 등과 같은 투입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생산량, 즉 농작물 또는 가축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근거함.

- 'Bayer Crop Sciences' 및 'Corteva'와 같은 농식품 기업이 지원한 이 보고서는 농약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함께 유전자변형 작물이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제안함.

❍ EU회원국들은 EU 내 GM작물 재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GAP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난제가 될 수 있음.

- EU 입법자들은 농약 사용의 증가가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함.
- EU집행위원회 의장(Ursula von der Leyen)은 'zero-pollution'을 목표로 농업에서의 농약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로운 농약 사용을 줄이고, 저위험의 대안을 장려하는 정책을 골자로 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1859/Food-production-is-not-increasing-fast-enough-to-feed-the-world—report) (2019.10.16.)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사례*



❍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해감에 따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스마트 기기가 증가하고 ICT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형태인 비정형 데이터로 수집되고 저장되어, 정보의 검색 및 발굴, 분석이 어려운

* 나명환(전남대학교 통계학과 농업빅데이터연구실 교수)(nmh@chonnam.ac.).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R&D브리프 2011),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이슈분석보고서 2010) 등 국내자료와 Science and Technology offic(2018), Geoff Sawyer & Marc de Vries & Nikolay Khabarov(2018)등의 외국자료를 정리하여 요약함.

거대한 규모의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음.

❍ 빅데이터의 활용은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농업인들은 작물을 재배하는 전 과정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제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좋은 생산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량 향상 및 품질향상을 하고 있음.
- 농업인들은 온실에서 사물인터넷기술 (IoT)을 통해 온·습도, CO2 등 농작물의 생육 및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하고 있음.

❍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에서는 스웨덴의 Agritech Inovation A에서 개발한 Swedeponic 시스템을 이용한 식물공장을 운영하여,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허브류를 생산하고 있음.

- 자동재배 베드 이송시스템, 자동 스페이싱, 로봇을 이용한 자동정식체계를 비롯한 파종, 정식, 수확, 포장과정에서 자동화로 인력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장 내 온도관리는 대부분 지열히트펌프방식을 채택하여 냉난방을 운영함.
- 수경재배방식은 박막수경(Nutrient Film Technique, NFT) 방식을 채택하고 순환식 수경재배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친환경방식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광원은 대부분 고압나트륨 등을 사용함.

❍ 일본은 Smartagri 시스템을 통해 농업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식물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식물공장에서 온·습도, 조도 등 환경 센서로 부터 수집된 온실의 정보를 이용한 스케줄링 소프트웨어로 상추, 토마토 등 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고, 인공광 등을 이용하여 최적 재배환경을 만들어 농업의 공업화를 이루고 있음.

❍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은 벨기에의 Hortiplan사에서 개발한 Hortiplan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추를 비롯한 엽채류 재배 및 일부 허브생산에도 활용하고 있음.

- Hortiplan 시스템은 재배베드 자동이송 시스템(Mobile Gully System, MGS)을 중심으로 묘 자동 이식로봇, 자동 재식거리 조정방식, 재배베드가 수확장소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수확체계를 채택하여 최소의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임.

❍ 덴마크에서는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노지재배 작물의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자료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작물의 수확량을 향상시키고 병해충을 관리하며, 화학품 적용을 최적화하고 있음. 또한 머신러닝기법을 도입하여 병해충 또는 가뭄 및 홍수 등 작물을 재배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감지하고 있음.

❍ 일본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을 정부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중임.

- 전략적 혁신 창조프로그램(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s, SIP)을 통해 일본 정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IoT, 로봇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비용 감소를 이루고,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고자 함.

❍ 스마트 농업은 2016년에는 104억 엔 시장규모이나 2023년에는 3배인 330억 엔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일본 홋카이도대학교(Hokkaido University)의 VeBots(Vehicle Robotics Laboratory)에서는 사람이 운전하여 수행하는 일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트랙터를 개발함.

❍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인 Blue River Technology사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식물체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즉각적으로 식물체와 잡초를 구분하여 제거하는 기술인 Lettuce Bot을 개발함.

※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1. R&D 브리프. 월간저널 제17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0. 이슈분석보고서 제3호: 식물공장,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이용범 & 최기영. 2010. 선진국의 식물공장 현황. 바이오인.
Geoff Sawyer & Marc de Vries & Nikolay Khabarov. 2018. A Case Study Farm Management Support in Denmark. EARSC
Science and Technology Office. 2018. Agriculture in Japan New developments in Smart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Office Tokyo.
Steve Sonka. 2014. Big data and the ag sector: more than lots of numbers. IFAMA.

미국

미국 농업부 장관, 미·일 무역협정 관련 성명 발표

❍ 지난 9월 25일, 미국 농업부장관(Sonny Perdue)은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함.

-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은 미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거래이며, 특히 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확대는 미국 농업인들과 목장업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임.
- 미국은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을 통해 세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시장의 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음. 동 협정이 시행되면 미국 생산자들은 현재 일본 시장에서 특혜 관세가 있는 국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임.

❍ 미·일 무역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관세를 철폐하거나 의미 있는 관세 인하 또는 낮은 관세(일반적으로 무관세)로 특정 수입량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함.

- 미·일 무역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은 일본이 포괄적·잠정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 TPP)에서 회원국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관세 수준임.

❍ 일본이 2018년 수입한 미국산 식품 및 농산물은 141억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52억 달러는 이미 면세였음. 1단계 관세협정에 따라 일본은 72억 달러의 미국산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됨.

❍ 관세인하: 일본은 신선 쇠고기, 냉동 쇠고기, 신선 돼지고기, 냉동 돼지고기 등 29억 달러 상당의 축산물에 단계적인 관세 인하를 적용함.

❍ 관세철폐: 일본은 아몬드, 블루베리, 크랜베리, 스위트콘, 수수, 브로콜리 등 약 13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임.

- 또한 와인, 치즈, 냉동가금류, 가공 돼지고기, 신선체리, 냉동감자, 계란제품, 토마토 페이스트 등 약 30억 달러 상당의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 단계적 관세철폐를 적용할 예정임.

❍ 국가별 쿼터(Country Specific Quotas, CSQ): 일부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별 쿼터 설정을 통해 우선적인 시장접근성이 제공됨. 일본은 미국산 메밀과 메밀 제품, 포도당,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이눌린 등 대해 특정수량을 우대 관세율(일반적으로 무관세)을 적용할 것임.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이번 협정은 일본이 쇠고기, 돼지고기, 유장, 오렌지, 경주마 등의 수입에 있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은 화훼, 녹차, 제과제품, 소스류 등 약 42개의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 관세 철폐 및 관세 인하를 제공할 것임.

❍ 또한 미국은 일본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WTO TRQ(Tariff Rate Quotas)[1] 총량쿼터 물량을 수정하여, 일본산 쇠고기 생산자가 총량쿼터 물량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함.

※ 자료: USDA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9/09/25/secretary-perdue-statement-signing-us-japan-trade-agreement) (2019.09.25.)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중장기 미국 농업전망에 미친 영향*

❍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2018년과 2019년 USDA 농업전망치 차이가 발생함.

- 2019년 USDA 농업전망치는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 대두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함.

1)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임(네이버 지식백과).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Long-Term U.S. Agricultural Outlook Affected Broadly by Uncertainty of China's Market"(2019.9.3.)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따라서 중국의 보복관세가 존재하지 않았던 2018년 USDA 농업전망치는 2019년 USDA 농업전망치와 차이가 많음.
- 2018년과 2019년 USDA 농업전망치 차이는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함.
-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감소하게 되고 옥수수와 면 수출량은 증가함.
-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돼지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미국의 돼지수출량은 감소하는 반면, 쇠고기 수출량은 증가하게 됨.

〈표 1〉 2018년과 2019년 USDA 주요상품 수출량 전망치 차이

품목	단위	2018 전망치	2019 전망치	전망치 차이
대두	MMT	68.447	60.555	-7.9
수수	MMT	7.112	3.810	-3.3
옥수수	MMT	55.883	68.583	12.7
면	Million bales	15.455	17.450	2.0
밀	MMT	27.488	27.157	-0.3
쌀	MMT	3.731	3.366	-0.4
쇠고기	TMT	1,350	1,535	185
돼지고기	TMT	3,155	3,044	-111
닭	TMT	4,053	3,801	-252

주: MMT는 million metric tons, TMT는 thousand metric tons.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중국 농업 통계의 불일치를 수정하면서 2019년 이전에 산출한 농업전망치와 2019년 농업전망치는 차이가 있음. 특히, 중국 옥수수 생산량과 재고량 통계 수정으로 국제 옥수수 시장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침.
- 2018/19년 중국 옥수수 생산량은 3,100만 톤, 재고량은 1억 4,300만 톤을 추가적으로 통계에 합산함으로써 총 1억 7,400만 톤의 통계 불일치가 발생했음.
- 통계 불일치는 2018년 10월에 개선되었으며 2019년 장기전망치부터 적용함.

❍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가축 손실은 2019년 농업전망치에는 고려되지 않았음.

- 2019년 USDA 농업전망에서 중국의 돼지 생산량은 1% 증가하고 2019-2028년 동안 1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함.
- 2019년 7월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생산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하고,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하였음.
- 생산량 감소로 인해 중국의 돼지 수입은 200만 2,000톤으로 기존의 2019년 USDA 농업전망치보다 많아졌음.
-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생산량 감소는 돼지 사료 감소로 이어지면서 미국 대두사료 수출에 대한 USDA 농업전망치보다 밑돌 수 있음.

❍ 중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가 지속되거나 철폐될 시 미국 농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중국 농업 통계에 대한 불일치 개선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의 보복관세와 함께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미국 가구 식량안보 조사 결과*



❍ 대부분의 미국 가구들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식량 확보와 접근이 가능하지만 식량안보에 취약한 가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농무부는 식량영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식량안보 확대를 위한 미국 가구 식량안보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함.

❍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Economic Reserch Service)에서는 2018년에 3만 7,3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식량안보 취약성으로 보일 수 있는 경험이나 행동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

- 동 설문조사는 가구당 식량안보, 식품구매지출, 연방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을 다루는 설문조사임.

* 2018년 미국 가구 식량안보 조사 결과

-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적은 식량 섭취량과 불규칙한 식사 패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2만 가구 (0.6%)는 여전히 매우 낮은 식량안보를 경험하고 있음.

❍ **[하위집단 및 주 조사 결과]** 식량안보율이 국가 평균보다 낮은 하위집단과 주가 존재함.

- **(하위집단)** 연방 빈곤선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구, 흑인과 히스페닉 가구 등이 식량안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주마다 큰 편차)** 식량안보율이 주마다 크게 편차를 이루는데 뉴햄프셔주는 7.8%인 반면, 뉴멕시코주는 16.8%로 미국 주마다 식량안보율의 차이가 큼.
- **[식품 지출, 연방 영양지원 프로그램 참여 조사 결과]** 가구마다 소득 대비 식품 지출의 비중 차이가 있고, 식량안보에 취약한 가구는 한 번 이상의 연방영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함.
- 식량안보 안정 그룹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가구는 식량안보 취약 그룹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가구보다 평균 21% 정도 더 식품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지에 답변한 식량안보 취약 가구의 65%는 1회 이상의 연방영양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연방영양지원프로그램에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학교점심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이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2017년 미국 식품소매가격 하락*

❍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는 식품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2016년 이전까지 식품소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Amber Waves: Retail Food Price Inflation Has Slowed Over Time(2019.7.)과 Factors Impacting Grocery Store Deflation: A Closer Look at Prices in 2016 and 2017(2019.4.)"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2011년은 전년 대비 식품소매가격이 4.8% 증가하였으며, 2012년은 전년 대비 2.5% 증가함.
- 식품소매가격 변동은 주로 유가와 같은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 특히, 1999-2018년 식품소매가격 최대 증가 폭은 2008년 6.4%였으며, 같은 연도(2008년) 곡물, 쌀, 유지작물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받았음.

❍ 반면, 2016년 식품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2017년은 전년 대비 0.2% 감소함. 농업경제연구소는 가격하락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2015-2017년 동안 미국 내 육우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시장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하락이 평균 식품소매가격 하락을 견인하였음.
- 또한 2014년 이후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 농산품 수입품의 상대가격이 하락함.
- 동기간(2015-2017년)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 심화도 가격 하락요인이 됨. 식품소매상의 식품 대량포장판매(bulk)와 인터넷 식품구매와 같은 소비자들의 식품구입경로 다변화도 가격하락에 영향을 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0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에탄올 생산 부산물인 DDGs 증가 추세*



❍ 2005년부터 시작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enewable Fuel Standard)를 통해 에탄올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함.

- 2017/18년 에탄올 생산량은 45억 갤런으로 2005년 대비 288% 정도 증가함.

❍ 에탄올을 생산하면서 에탄올의 부산물인 DDGs의 생산량도 함께 증가함.

- 2005/06년 미국 에탄올 부산물인 DDGs 생산량은 900만 톤에서 2017/18년에는 3,850만 톤으로 약 318% 증가함.
- 2018/19년 에탄올로부터 생산되는 DDGs는 3,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Dried Distillers Grains(DDGs) Have Emerged as a Key Ethanol Coproduct"(2019.10.1.)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DDGs 무역 증가세도 두드러짐.

- 2005/06년도 미국 에탄올 부산물인 DDGs 수출은 120만 톤, 2017/18년에는 1,200만 톤으로 10배 증가하였음.
- 주수입국은 멕시코, 태국, 베트남으로 가축사료로 수출됨.

❍ 미국 에탄올 부산물인 DDGs 생산 및 수출은 가솔린이나 에탄올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이탈리아,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 이탈리아 경제금융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 최근 발간한 2019년 국가경제금융문서(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DEF)에 식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함.

- DEF는 중기 재정 및 경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이탈리아의 주요한 정책 수단임
- 최근 발간된 DEF에는 유럽 및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식품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이탈리아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는 농식품 및 농업부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한 유럽 및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임.

❍ 이탈리아 농민단체 'Coldiretti'는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환영하며, 신속한 이행을 요구함.

❍ 이탈리아 농민단체에 따르면, EU 식량정책은 생산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해 불확실하고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신선육류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지만, 살라미(salami) 등과 같이 가공된 육류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신선과일에는 원산지 의무 표시를 적용하나 과일즙에 사용되는 과일이나 꿀, 설탕 등에는 명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 또한 이 단체는 이탈리아 농업인들은 식품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국가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정확한 정보에 따른 구매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함.

❍ 이탈리아 농식품시장연구소(ISMEA)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인의 약 93%는 식품의 원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약 73%는 이탈리아에서 제조되는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1792/Italy-pledges-to-strengthen-food-origin-labelling) (2019.10.10.)

프랑스 농업인, EU 무역협정에 대해 항의



❍ 지난 10월 8일, 프랑스 농업인연맹(French National Federation of Farmers)과 젊은 농업인연합(Young Farmers Union)은 약 1만 명의 농업인들을 거리로 불러 모음.
- 농업인 연합들은 EU-캐나다간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인 CETA와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의 EU-Mercosur협정 등과 같은 국제 무역협정을 프랑스 정부가 거부할 것을 요구함.

❍ 농업인연맹들은 언론 성명을 통해 EU가 체결한 CETA, Mercosur와 같은 무역협정은 유럽에 저렴한 수입품이 넘쳐나 프랑스 농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농업인들은 이미 농업부문의 낮은 이익, 부족한 투자와 혁신 등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임.

❍ 젊은농업인연합의 사무총장(Jeremy Dutor)은 이 항의는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정부와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함이며, 농업의 미래를 위해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함.

❍ 이 시위는 또한 농업인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축처리에 따른 영향 등으로 농업이 비판받는 것을 항의하는 것으로 이어짐. 프랑스 농업인들은 환경단체나 동물단체 등 운동가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은 농장에 무단 침입을 하는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함.

❍ 농업인연맹들은 프랑스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농업을 보호하고, 더 많은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1779/10000-French-farmers-protest-against-CETA-and-Mercosur-deals) (2019.10.09.)

EU, 농산물의 가격 투명성 강화 조치 도입 결정*



❍ EU집행위원회는 2014년부터 공정한 농식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음.
- 2016년에는 유통과정에서 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농산물 시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11월 세 가지 권고사항(불공정관행 금지, 생산자 조직화, 시장 투명성 강화)을 발표하였음. 2017년에는 각 권고사항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2018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시민들의 88%가 유통과정에서 농업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2019년 9월 11일 EU 집행위원회는 가격 투명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유통단계별 가격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음. 실제 도입 시기는 2021년 1월 1일로 예상됨.
- 대상 품목은 축산물, 유제품, 와인, 곡류, 유지종자, 두류작물, 과일, 채소, 올리브유, 설탕임.

---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Fairness in the food supply chain: commission welcomes Member States' support for greater price transparency"(2019.9.11.)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 가격 결정 과정 확인을 위해 각 유통단계별 농산물 가격 정보 수집이 강화됨. 수집된 데이터들은 농식품 데이터포털(Agri-food data portal)과 유럽연합 시장관측(EU market observation)에 게시될 예정임.

- 데이터 수집은 기존에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시스템과 절차들을 따를 것이며, 각 회원국은 가격과 시장 데이터를 수집할 책임이 있으며, 비용과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집행위원회에 대표가격(representative price)을 보고하기로 하였음.

❍ 현재도 농산물 시장에 관해 상당한 양의 정보(생산, 소비자 가격, 생산량, 교역량 등) 이용이 가능하나,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단계별 시장정보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른 정보비대칭은 농업인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또한 가격 투명성 강화는 경제주체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가격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유통절차를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국,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 지속*



❍ 영국 환경식품농촌위원회는 2015년 농촌의 광대역 통신망(broadband) 구축 미비로 농촌경제 위축과 농촌 소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이후 광대역 통신망과 무선 커버리지(mobile coverage)가 확대되었으나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였음.

- 특히 접근성이 낮은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광대역 통신망 시설 미비와 좁은 커버리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국 정부는 광대역 통신망의 보편적 공급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USO)에 따라 요청이 들어온 지역에 광대역 통신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2020년 3월부터 요청 가능), 다양한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농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국 하원 환경식품농촌위원회(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committee)에서 발표한 "An Update on Rural Connectivity"(2019.9.11.)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정부는 서비스 요청 지역에 한 달 45파운드를 지불할 경우 최소 10Mbps 이상의 업로드/다운로드가 가능한 연결망 상태를 보장해 주어야 함.
- 2018년 7월 18일에는 완전한 광케이블(full fiber) 설치와 5G 기술 정착에 대한 국가 비전을 담은 보고서(Future Telecoms Infrastructure Review, FTIR)를 발표했음. 보고서에서는 연결성이 낮은 하위 10% 지역(주로 농촌, 도서 지역)을 선정하고 광케이블 설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outside-in' 방식으로 이들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도-농간 디지털 격차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디지털 격차의 심각성과 규모, 포괄적 비용 등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정책은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면서 디지털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음.
-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USO) 역시 실제로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현재 최소 속도 기준(10Mbps)은 너무 낮게 설정되었음.
- 2025년까지 완전한 광케이블을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임.

❍ 정부와 무선통신망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촌 로밍[2](rural roaming)이 농촌의 낮은 커버리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농업지식혁신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발간*



❍ EU 집행위원회는 4번째 농업지식혁신시스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AKI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발표함. 이 보고서는 EU집행위원회가 지난

2) 고객이 가입한 이동통신사가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으로 고객이 이동하였을 때, 다른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Knowledge and innov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food and farming"(2019.9.26.)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3년간 작업한 것으로, 유럽연합 전반에 걸쳐 농업부문의 지식 창출과 혁신 과정을 통합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논의에도 참고가 될 것임.

- EU집행위원회는 지식 창출과 혁신을 공동농업정책이 추구해야 할 범분야적(cross-cutting) 목적※으로 선정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농업·농촌이 당면한(혹은 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하나의 분야로 다루기보다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목적임을 뜻함.

❍ 다양한 주체들(연구자, 지도기관, 농업인, 임업인 등)이 농업혁신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은 프로젝트 결과가 빠르고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의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은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인과의 교감을 통한 상향식 혁신 방식을 의미함. 연구자-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음.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EIP-AGRI)'의 운영그룹(Operational Groups)과 'Horizon 2020'의 다주체 참여방식(Multi-Actor Approach, MAA)을 예로 들 수 있음.
-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성과는 회원국마다 크게 달랐으며, 때로는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또한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물들은 많았으나, 분절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실제로 활용되기 어려웠음.

❍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통합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식 교환과 혁신과정이 보다 조직적이고 빠르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중복 방지와 비용 감소에 효과적일 것임.

- 장기적으로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통합성 강화는 농업 지식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 회원국 간 지식의 공유를 장려하는 동시에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농업인 수요에 구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업이 보다 적응력이 높고, 탄력적인 분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한편,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서는 개별 회원국들이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수립 시, 국가별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구조와 주체들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6월에 발표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9개의 공동농업정책 목표 달성방법에 대해 각자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의 일관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각 회원국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할 권리가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0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2018년 공동농업정책 회계 감사 결과 발표*



❍ 유럽연합감사원(European Copurt of Auditors)은 2018년 공동농업정책 지출 내역(총 약 581억 유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공동농업정책은 ⅰ) 활력적인 농식품 생산, ⅱ)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ⅲ)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크게 직접지불, 시장조치, 농촌개발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직접지불]**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항목에 포함된 예산의 72%가 직접지불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정책관리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과 토지구획식별시스템(Land Parcel Identification System)[3]을 통해 직접지불을 관리함. 결과적으로, 직불금 지급에 관한 오류(material error)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개발프로그램, 시장조치]** 농촌개발과 시장조치의 자격조건(eligibility conditions)이 복잡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유럽연합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이 발표한 "2018 EU audit in brief: Introducing the 2018 annual reports of the European Court of Auditors"(2019.10.)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3) 농업인이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하는 시스템임.

- ⅰ) 부적격한 수혜자[4], ⅱ) 면적이나 가축 수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ⅲ) 보조금 수령 조건이 되는 의무(상호준수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성과 평가]** 농촌개발프로그램 상의 조치들은 대체로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왔으나 비용단순화(simplified cost option)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평가지표(CMEF 등) 중 일부는 정책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용단순화는 농촌개발 정책을 위한 새로운 비용변제 방식을 의미함.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발생원가 기준으로 비용을 변제하지 않고 단위 비용의 표준 척도 방식, 총액 지불 방식, 고정 비율 자금조달 방식과 같은 단순화된 방식을 따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 동향*



❍ 일본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역인구의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음.

-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이 있는데, 이 법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해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함.
- 과소(過疎, depopulation)란,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 및 생산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지역을 과소

4) 예를 들어, 중소농 지원 자금 수령을 위해 실제로 같은 회사임에도 다른 회사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사례가 있었음.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동향,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최근 개정을 중심으로"(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vol.04, 2019.9.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지역이라 부르고 있음. 과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지역 산업경제의 침체와 농어촌의 경우 황폐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도시지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는 특징이 있음.

❍ 일본의 과소 시정촌(市町村)[5]은 2018년 4월 1일 기준 817개로 전국 1,719개 시정촌 중에서 약 47.5%에 해당되며, 과소 시정촌의 인구는 약 1,087만여 명으로 전국 인구의 8.6%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일본 국토의 59.7%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일본의 시정촌 현황(2018. 4월 기준)

구분	시정촌수	인구	면적
과소지역	817개 (47.5%)	10,878,797명 (8.6%)	225,468㎢ (59.7%)
비과소지역	902개 (52.5%)	116,215,948명 (91.4%)	152,503㎢ (40.3%)
전국	1,719개 (100%)	127,094,745명 (100%)	377,971㎢ (100%)

주 1) 시정촌수는 2018년 4월 1일 기준이며, "과소 시정촌"의 수는 ① 과소지역 시정촌, ②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시정촌, ③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구역이 있는 시정촌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2) 인구와 면적은 2015년 국세조사자료임.

❍ 일본은 1955년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래 1960년 이후부터 동경권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자 동경권을 제외한 지역이 낙후·과소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

- 이를 위해 1970년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을 제정했고, 1980년에는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으로, 1990년에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으로, 2000년에는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 지원정책을 추가해 지역활성화 시책을 추진함.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은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특별조치를 강구하고, 해당 지역들의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 고용 증대, 지역격차 시정 및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5)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2층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시정촌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고,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해할 수 있음.

❍ 해당 법률(「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총 34조로 구성되며, 과소지역의 요건(제2조), 과소지역자립촉진계획(제5조~제9조),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재정상의 특별조치(제10조~제13조), 그리고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각종 특별조치(제14조~제31조)가 규정됨.

❍ **[특별조치]** 행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행정지원)** 도로의 정비, 공공하수도 정비, 의료의 확보, 고령자 복지증진, 교통 확보, 교육의 내실화, 지역문화진흥, 국유임야의 활용 등이 있고, (금융지원) 농림어업 공고(公庫)와 주택금융공고에서 자금대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부 등이 있으며, (세제지원) 지방세의 과세면제 등이 있음.

❍ **[최근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일본은 2017년 3월 31일자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공포하였으며, 과소지역 지원의 실시 상황을 감안하여 과소지역의 선정 요건을 추가하고, 지원정책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함.

- 첫째, 과소지역의 선정 요건 추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신설)함.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과소지역의 선정 시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최신 연도가 추가됨. 기존의 제1호는 1960~1995년(35년간), 제2호는 1960~2005년(45년간), 제3호는1965~2010년(45년간)을 대상으로 과소지역을 선정했으며, 이번에 신설된 제4호에서는 1970~2015년까지 45년간을 적용 범위로 정함.

〈과소지역의 추가 선정 요건(2017년 3월 개정)〉

◈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신설〉

다음의 ① 인구요건(가~라 중 하나에 해당) 및 ② 재정력 요건에 해당되는 시정촌은 과소지역으로 선정

① 인구요건: 1970~2015년까지 45년간 인구감소율 기준으로서

가) 인구감소율 32% 이상

나) 인구감소율 27% 이상이고,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6% 이상

다) 인구감소율 27% 이상이고, 2015년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11% 이하

라) 1990~2015년(25년)간 인구감소율 21% 이상인 지역

※ 단, 가), 나), 다)의 경우 1990~2015년(25년)간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제외

② 재정력 요건: 2013년~2015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0.5 이하

- 둘째, 과소지역의 자립촉진을 위한 지방채의 대상 경비에 시정촌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나 전문대학 등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추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신설[6])함.

- 셋째, 감가상각(減価償却) 특례 및 지방세 과세 면제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정보통신기술이용사업은 폐지하고, 농림수산물 등 판매업[7]을 추가하였음(법 제30조, 법 제31조 개정).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지역 인구와 마을 미래예측(2045년 농촌구조)*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촌의 자원 유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음. 그중에서 농촌 지역 인구 및 마을 미래예측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농촌 지역 인구 추이와 미래예측]** 지역 유형별로 인구감소 진행에 차이가 나타남.

- 일찍이 인구감소 시기에 들어선 산간 농업지역(경지율 10% 미만, 임야율 80% 이상)은 1970년 이후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감소가 심화될 것이며, 2015년부터 2045년까지 30년간 산간 농업지역은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과반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전망임.
- 평지 농업지역(경지율 20% 이상, 임야율 50% 미만)에서도 인구의 30% 이상이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 **[농촌 마을구조 현황과 변화]** 전국의 평균적인 농촌 마을구조는 세대 수 50호(농가 11호), 인구 174명, 고령화율 35%, 경지면적 17ha임.

- 중산간 지역의 농촌 마을은 규모가 작고 고령화도 진행되어 있으며, 특히 산간 농업지역은 세대 수 및 인구 감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
- 모든 농촌 마을의 농가 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평지 농업지역을 제외한

---

6) 제18호는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의무교육 학교 및 공립 유치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이고, 제19호는 '공립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

7) 농림수산물 등 판매업이란 과소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 또는 해당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것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 일본 농림수산성 「農村地域人口と農業集落の将来予測—西暦2045年における農村構造−」(2019.8.3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농업지역의 판매농가[8] 수는 한 자릿수임. 특히 산간 농업지역의 농가 수는 마을당 4호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

❍ **[마을 변화와 활동상황]** 최근 5년간 40% 이상의 마을에서 세대 수가 감소하여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마을에서 인구가 감소하였음.

- 또한, 2015년 마을조사 결과에서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화율이 높은 마을일수록 마을 활동[9]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특히 인구가 9명 이하인 마을에서는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마을 인구 규모와 연령 구성 예측]** 코호트분석[10]을 통해 30년 후(2045년)의 마을인구를 추계하면 아래와 같음.

- 마을 소규모화에 의해 '인구 9명 이하'의 마을이 전체의 마을 중 9%, 산간 농업지역에서는 25%를 차지할 것이며,
- 마을 소규모화와 함께 세대원의 고령화 가속으로 마을 인구의 과반이 65세 이상인 마을(고령화율 50% 이상)이 산간 농업지역에서 65%, 중간 농업지역(임야율 50~80%)에서는 5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존속 위기 마을[11] 추계]** 약 14만 곳의 마을 중 존속이 위태로운 마을이 2015년에는 2,000곳이었으나 2045년에는 1만 곳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향후 30년간 인구가 현재의 1/3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수가 3만 곳(전체 마을의 23%) 이상, 전체 마을 중 마을 인구의 2/3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마을이 4,000곳에서 2만 7,000곳으로 증가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없는 마을도 9,000곳에서 3만 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홋카이도, 이시카와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도쿠시마현, 에히메현, 고치현, 오이타현이 2045년 존속 위기 마을 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8) 전체 농가 중 자급 농가를 제외한 농가(경지면적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 500만 원 이상)
9) 농업 생산에 관한 모임, 농수로 보전 및 관리 등
10) 관찰 대상자를 태어난 시기별로 구분하여 라이프스타일, 행동, 의식 등에 따른 소비 동향 분석
11) 인구가 9명 이하이며, 고령화율이 50% 이상인 마을

농산물 수입(收入)보험 개선*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한 가지 기준으로 적용되던 농산물 수입보험을 2020년부터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액) 감소율에 따른 3가지 유형을 신설하여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하였음. 이를 통해 보험료는 현행 대비 최대 40%까지 저렴해짐.

- 농산물 수입보험은 2019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보험기간 동안 생산·판매하는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액이 과거 5년간 평균 수입액의 90%를 밑도는 경우 감소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보상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본형은 기준수입이 1,000만 엔인 농가가 보험기간[12] 중 수입액이 900만 엔을 밑돌 경우, 보전금을 통해 810만 엔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음. 신설된 3가지 유행은 아래와 같음.

- (유형 ①)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이 900만 엔을 밑돌면서 기준수입 대비 수입 감소율이 50% 이하인 경우. 보험료는 현행 대비 약 10% 저렴한 7만 엔
- (유형 ②)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이 900만 엔을 밑돌면서 기준수입 대비 수입 감소율이 40% 이하인 경우. 보험료는 현행 대비 약 20% 저렴한 6만 2,000엔
- (유형 ③)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이 900만 엔을 밑돌면서 기준수입 대비 수입 감소율이 30% 이하인 경우. 보험료는 현행 대비 약 40% 저렴한 4만 4,000만 엔

❍ 도입 첫해인 2019년에 10만 경영체가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실제 가입 수는 2만 3천 경영체로 목표의 1/4 수준에 그침.

- 이에 따라 농가에서 저렴한 보험료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을 수용하여 보상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여 농가 부담을 줄여 제도 가입을 촉진하고자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일본 농림수산성 「収入保険制度の導入及び農業共済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검색일 2019.9.24.), 일본농업신문 「収入保険 料金下げ 2020年 新メニュー 補償に応じ3段階 加入増へ農水省」(2019.9.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12) 개인의 경우 1월~12월, 법인의 경우 각 법인이 설정한 사업연도 1년간

일본, 소비자식품 동향*



❍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2019년 7월 소비자 동향조사를 시행하였음. 그 결과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경제성', '간편성', '건강'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현재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지향하는 사항으로 2반기(半期) 연속으로 성장했던 '건강지향'(43.8%, 이전 조사 대비 △2.8%p)은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경제성 지향'(38.1%, 이전 조사 대비 +1.2%p)과 '간편화 지향'(33.4%, 이전 조사 대비 +2.2%p)이 증가하였음. 또한, '국산지향'(14.3%, 이전 조사 대비 △1.3%p)은 4반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세대별]** '건강','안전', '국산'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향하는 경향이며, 반면 '경제성', '간편화', '맛'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음.

❍ **[국산식품 확인 여부]** 식료품 구매 시 국산식품 확인 여부에 대해 '확인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2%(이전 조사 대비 +0.9%p)로 최근 3반기 연속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며, 외식 시 '확인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이전 조사 대비 △2.5%p)로 2016년 7월 본 조사를 시작한 이후 국산품인지 확인하는 경향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국산식품 인식]** 국산식품 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64.5%(이전 조사 대비 △0.1%p)로 이전 조사와 비슷했음. 이는 2008년 본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값으로 국산식품의 가격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국산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매우 낮아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수입식품 인식]**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이전 조사 대비 △1.7%p)로 8반기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는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값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화되는 추세임.

---

* 일본정책금융공고「国産食品へのプレミアム感 薄まる傾向~高齢世代は健康志向、若者世代は経済性志向~〈令和元年7月消費者動向調査〉」(2019.9.3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가격허용도]** 수입식품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라면 국산식품을 선택할 것인지 가격허용도를 조사한 결과, 다소 비싸도 국산품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57.9%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한편, '굳이 국산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됨'은 16%로 전자에 비해 낮지만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0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일 무역협상*



❍ 미국과 일본 양국 대표는 2019년 10월 7일 워싱턴에서 미·일 무역협상에 정식 서명하였음. 일본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미국산 쌀에 대한 관세 철폐는 보류함.

- 미국은 본 협상을 대통령 특례조치를 통해 발효시킬 예정이며, 일본은 임시국회에서 승인되면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 TPP 교섭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던 자동차·부품 관세에 대해서는 합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철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보류되었음.
- 농산물은 미국산 쌀과 제조품을 포함하여 관세 인하·철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TPP에서 허용했던 무관세 7만 톤의 기준 도입은 이번 협상에서는 보류됨.
- 소고기, 돼지고기, 와인 등 단계적 관세 인하 품목은 협상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TPP 가입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함. 한편, 소고기 세이프가드는 2022년 상반기까지 TPP를 수정하여 TPP 발동 기준 수량에 미국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단, TPP 회원국이 협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함.

❍ 또한 미·일 디지털 무역협상에도 서명하였음. 법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

* 일본경제신문「日米、貿易協定に正式署名　20年1月にも発効」(2019.10.8.), 일본농업신문 「日米貿易協定最終合意　ＴＰＰ並みに開放」(2019.9.27.), 일본 내각관방「日米貿易協定、日米デジタル貿易協定の概要」(2019.9.2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털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여 미·일 무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일 양국의 무역협정은 두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협정 발효 후 2020년 봄에도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전망임. 미 의회와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안전기준 및 약가(藥価)제도 등 일본의 비관세 장벽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음.

〈표 3〉 미·일 무역협상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미국산 수출품	쌀	• 쌀(벼, 현미, 정미, 쌀가루) 및 제조품을 포함한 모든 쌀 관련 항목은 관세 철폐 및 인하에서 제외
	소·돼지고기	• 소고기는 TPP와 동일하게 관세를 최종적으로 9%까지 인하,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은 2020년도 24만 2천 톤, TPP 회원국에 수정 협의 필요 • 돼지고기는 TPP와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종가세는 철폐, 종량세는 50엔/kg까지 인하
	유제품	• 탈지분유·버터 등 TPP에서 관세 할당량 수량이 설정되어있는 33개 항목에 대해서는 새롭게 미국만의 기준을 만들지 않음. • 탈지분유는 기존의 WTO 기준의 단백질 함유량 35% 이상의 수입 기준 5천 톤(생유 환산)을 설정
	밀가루	• TPP와 같은 단계적 관세 철폐 • 최대 15만 톤
	원예 관련	• 사과, 오렌지, 토마토 퓨레, 페이스트, 토마토 주스는 TPP와 동일하게 단계적 관세 철폐 • 오렌지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수량은 TPP의 95% 수준으로 2019년도 3만 5,150톤 • 토마토케첩, 포도, 오렌지·사과 과즙(일부 제외)은 제외
	와인	• TPP와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일본산 수출품	자동차·부품	• 교섭을 통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함.
	농산품	• 미국이 일본산 소고기에 대해 저관세 수출규제를 실질적으로 확대,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최소시장접근(MMA)을 6만 5,005톤으로 설정 • 참마, 절화 등 수출 관심이 높은 42가지 항목 관세 인하, 철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